

생성형 AI 규제 완화에 노점은 은행권

연중무휴 점포 등 AI 은행원 확대

신한은행, 'AI 브랜치' 연중무휴 운영
KB국민은행, 송금 사전 예방 시스템
카카오뱅크, 대화형 금융 계산기
우리은행, 주담대 상품 상담에 도입
금융위, 금융권 AI 협의회 열어
금융기관 내부망서 오픈소스 AI 허가

은행권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낸다. 올 하반기 들어 각종 규제 철폐로 광범위한 AI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각 은행은 AI를 활용한 연중무휴 점포, 대화형 금융 계산기, 보이스 피싱 예방 등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생성형 AI의 업무 활용을 늘리고 있다. 각 은행이 AI 은행원을 활용한 휴일 없는 지점, 보이스피싱 감지 및 예방, 대화형 금융 계산기 등을 선보이는 가운데 AI가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 주담대대출 상품도 등장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의 규제 축소로 금융기관의 AI 활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각 은행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은행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영업점 통폐합 및 비대면 거래 보급에 힘썼던 만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차별화를 위해 서비스 개발에 힘쓰는다는 관측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AI은행원을 활용한 연중무휴 점포를 개점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1월 시청역에 'AI 브랜치'를 개점했다.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AI 브랜치에서는 AI 은행원을 통해 예·적금 계좌 개설, 체크카드 발급, 환전 등 일부 창구업무를 이용할 수 있



지난달 시청역에 문을 연 '신한은행 AI브랜치'에서 직원이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 신한은행 AI브랜치에서는 AI상담원이 창구 안내부터 상품 설명 및 가입까지 전 과정을 무인으로 제공한다. /뉴시스

다. 신한은행은 향후 AI은행원에 실시 간 번역, 금융사기 예방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AI를 활용 중이다.

비대면 거래 시 이상 패턴을 감지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를 탐지하고,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로의 송금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카카오뱅크는 간편한 금융상품 비교를 제공하는 '대화형 금융 계산기'를 개발 중에 있다.

대화형 금융 계산기는 각종 여·수신 상품 이용 시 금리 등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대출액과 금리, 대출 기간 등을 대화창에 입력하면 월 납부 예상 금액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계산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생성형 AI를 모바일 뱅킹 내 주담대대출 상품 상담에 도입했다. 우리은행 모바일 앱 '뉴우리WON뱅킹'에 도입된 'AI뱅크' 서비스는 주담대대출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기존 챗봇 상담과 달리 대화 형태로 대출 상담을 진행하며,

소비자의 각종 질문에 실제 대출 담당 직원이 상담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제공한다.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규제 축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명동은행회관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망 분리, 보안 규제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활용이 어려웠던 오픈소스 AI를 금융기관 내부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오픈소스 AI를 별도로 선별 및 검증하는 별도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내에 구축하는 내용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들은 AI 인프라 및 데이터 부족,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 부재 등 애로사항을 제기해 왔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AI 인프라,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후 항공기 공급좌석 90% 이상 유지해야

(2019년 대비)

공정위, 슬롯·운수권 시정조치 수정
마일리지 전환비율 2년 내 결정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승인받는 대신 항공기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향후 2년 이내 두 회사 통합 전까지 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부과했던 일부 시정조치를 11일 전원회의를 열어 변경·구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결합회사의 연도·노선별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비율을 '90% 미만'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한 연간 좌석 수가 1만석이라면, 앞으로 최소 연간 9000석 이상 공급해야 한다. 이는 2019년 대비 올해 상반기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비율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 노선에 부과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시정조치도 수정됐다. 2022년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 탄생 시 운임 인상 등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슬롯·운수권을 당국에 반납토록했다. 당시 반납은 '기업결합 이후'부터 이행하도록 했는데,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라 '결합일 이전'에 있던 일도 시정조치 이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수권·슬롯 반납은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한 시정조치도 신



11일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 모습. /뉴시스

청이 없더라도 반납하도록 수정했다.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이전에 부과한 반대한 시정조치 준수 여부를 공정거래조정원이 함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마련해 시정조치 이행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양사간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보고받고, 통합 항공사로 출범하는 향후 2년 내 전환 비율을 정하는 등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태도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아시아나항공 1마일리를 대한항공 0.7마일리지로 전환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마일리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 협의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 시작된 두 회사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됐다. /세종=한홍수 기자 h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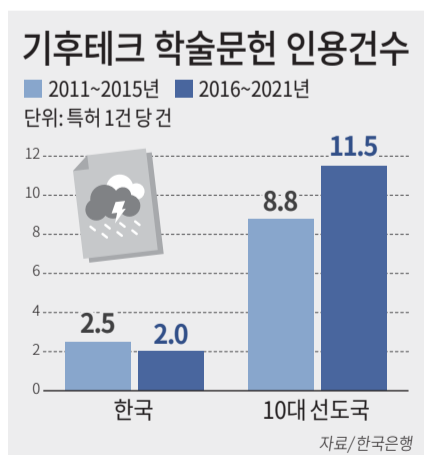
뜨거워지는 지구, 미흡한 기후테크 혁신

한은 '기후변화 대한 역할' 심포지엄
탄소저감 기술 특허, 일부 싹싹현상
특허출원 인용 저조... 질적평가 '미흡'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탄소중립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배출되는 양과 흡수되는 양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배출을 없애는 것이다.

한국은행 최이슬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12일 열린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기후테크의 혁신이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상품의 생산을 줄이거나 ▲상품의 생산규모는 유지하되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후자



를 위해선 탄소저감기술을 개발·적용하는 기후테크 혁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특허가 일부 기업에만 쏠려 있는 등 과급력이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건수는 미국(35%)과 일본(27%)에 이어 세계 3위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해 주요 선진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2010년대 초중반 이후 기후테크 특허출원이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

하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시기 중국과 함께 특허출원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은 상위 4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4개 기업의 기후테크 특허출원 비중은 72.1%로 10대 선도국 평균치인 29.7%를 크게 상회했다.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기록한 네덜란드(46.5%)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허출원의 인용도 저조했다. 2011년부터 2021년 중 국가별 기후테크 특허의 질적 평가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건당 피인용건수는 중위권에 속했지만 선두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최근 기후테크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보다 질적성과가 낮았다.

이에 대해 최 과장은 기후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의 실효성 제고 ▲벤처캐피탈 투자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올해 감사인 선임 위반 기업 264곳

금감원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올해 외부 감사 대상 회사, 4.2만곳

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다른 선임 기한과 감사인 자격 요건 등을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10월 기준 외부 감사대상 회사는 4만 2122곳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만 1744곳에서 2021년 3만 3250곳, 2022년 3만 7519곳, 2023년 4만 1212곳으로 증가했다.

감사인 선임 관련 위반으로 인한 감사인 지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0월까지 264곳이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됐다. 지난해 122곳보다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

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나 금융회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계약을 유지해야 하며, 3년 동안 회사종류가 바뀌었다면 바뀐해를 기준으로 다시 절차를 거쳐 3년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등록회계법인 40개사만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형비상장회사나 금융회사는 등록 법인이 아니더라도 회계법인만을 선임할 수 있다.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는 감사인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면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허정원 기자 zelkova@